

비말차단마스크 약국 판매... '가짜뉴스' 의심 받는 이유

시민들 "사흘간 10군데 허탕"...약사들 "우린 못받아" 오프라인도 하늘의 별따기... "생산량 늘리는게 시급"

직장인 조모씨(39)는 지난달 30일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구매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을 찾았다가 허탕을 쳤다. 조씨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약국에도 풀렸다는 소식에 오늘 포함 사흘 동안 10여곳을 둘러봤는데 한곳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약국에서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안 들어온다. 덴탈형 마스크를 가리키며 저걸 구매해 사용하시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 덧붙였다. 덴탈형 마스크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차단 효과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능이 떨어진다.

(뉴스1)이 같은 날 찾은 서울 강남구 대형종합병원 인근 약국에서도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없었다.

약사 A씨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약국에 풀리긴 할 텐데 소량 공급이라 우리 약국에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약국의 약사 B씨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약국까지 물량이 안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용 마스크'로 기대를 모았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안 보이

다. 지난달 5일 온라인 판매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약국·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도 풀렸지만 품귀는 여전하다.

온라인에서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이른바 '1분 마스크'로 통한다. 판매 개시 후 수 분 만에 매진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판매 시작 시간인) 매일 오전 9시 구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는 내용의 글이 넘쳐난다.

오프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약국의 경우 전국 2만여 곳 중 일부에만 공급돼 비말 차단용 마스크 구매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직장인 정모씨(44)는 "우연히 약국에 들렀다가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1장 구매했는데 약국에서 나를 향

해 '진짜 은 좋으신 분'이라고 할 정도"라고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생산·공급량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6월 4주차(지난달 21~27일)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181만 장이다. 1일 1000만장 안팎 공급되는 공적마스크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가장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웰컴스는 1일 20만 개를 만들고 판다. 다른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업체도 하루 생산량이 20만 개가 안 된다.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건 마진이 높지 않아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가는



500원안팎인데 비해 공적마스크인 KF94 가격은 1500원이다. KF94를 생산·판매하는 게 더 이득인 셈이다.

여름이 지나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가 시들해지고 다시 KF94 구매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한뼨한다.

이를 감안하면 업체들도 굳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생산라인을 바꿀 필요가 없는 셈이다.

다만 이번 달부터 오프라인 판매량이 늘 것으로 예상돼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손에 쥐는 시민들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이슬 기자



햄버거병 예방·급식 점검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구청 행정지원과 공무원 단체팀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에 대한 조리 상태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서형원 청암대 총장, 악의적 편파 보도 강력 반발

"청암학원 이사장, 근거없는 고소 내용·악의적 해설기사 반복 보도"

서형원 청암대 총장이 최근 일부 언론의 악의적 편파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서 총장은 반박자료에서 지역 인터넷 A 기자가 "청암대 총장, 교직원 무더기 업무방해 고소로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별 것도 아닌 일을 갖고 직원들을 대거 고소질이나 하는 총장으로 묘사했다는 것.

서 총장은 "A 기자는 지난해 9월에도 '임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셀프결재로 고액 연봉을 책정했다'는 청암학원 이사장의 근거없는 고소 내용과 악의적 해설 기사를 반복해서 보도하고 SNS로 기사를 퍼 나르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 업무방해 고소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셀프 결재'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11월 "A 기자는 왜곡보도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기사들을 삭제토록 하라"고 결정했다.

서 총장이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을 보면 광주고법은 지난 1월 청암학원 이사장의 총장 면직조치에 대해 면직조치가 불법이므로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 총장은 같은달 20일 업무 복귀 예정을 알리고 출근했으나 총장실이 폐쇄 돼 있었다.

이사장은 '서형원 총장 직무부귀 불가' 입장을 부총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하고 전 교직원에게

알렸다. 이같은 불법 지시를 따른 사무처장은 총장실을 개방하지 않고, 총장이 대학의 주요 업무수단인 인트라넷에 접속할 권한(그룹웨어 ID)마저 차단했다.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서 총장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 돼 부득이 하게 이사장과 사무처장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며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이 총장 직무수행을 방해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들을 조사하게 되면 업무방해 모의 및 실행 관계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돼 지난 4월 추가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서천호·문정욱 집행유예 유지...조오영 전 행정관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희희 조찬영)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수사 방해할 목적이었던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봉우 기자



"7년간 성폭행·협박 당해" 용기냈지만 피의자 극단적 선택

피해 여성 4월말 경찰에 고소장...국민청원도 올려

7년간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던 피해 여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3분 기준 2349명이 서명했다.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 전

B씨는 지난 17일 '저를 7년간이나 성폭행하고 살인미수, 협박, 폭행, 강간 해온 가해자를 고발하며, 이에 더해 부실 수사와 정보 유출하는 경찰 수사관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국민청원에 올린 바 있다. 피해 여성은 "2013년부터 7년간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2013년 9월 A씨에게 강간을 당했고, A씨는 그걸 약점 잡아 연락을 받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하며 집에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